

노동자임이 땃땃하다는 후보에게 투표하라!

그리고 투쟁하자!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계약 폐기
노동시간 단축!

대선

- 땃땃한 노동자 후보를 지지하라
- 대선후보별 세월호 입장
- 박근혜 정부 하에서 꺾였었던 민주당

2, 3, 6면

사드를 즉각
철수시켜라

12면

- 성소수자의 등에
비수 꽂은 문재인
- 동성애자 군인
색출·처벌 중단하라

10~11면

노동계약 폐기
노동시간 단축

4~5면

- 프랑스 국민전선의
나치 본색
- 브렉시트 협상과
좌파의 과제

7~8면

‘4차 산업혁명’?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을까?

9면



김종우 기자

주요 대선 후보들의 세월호 관련 공약 비교

세월호 참사 해결하고 안전을 위한 규제 강화하라

김지윤

세월호 운동은 박근혜 퇴진 운동의 토양이었다. 박근혜 세력의 사악함에 수많은 사람들은 치를 떨었다. 박근혜가 쫓겨나자 세월호가 올라온 것은 진실 은폐의 주범이 누구였는지 확인시켰다.

퇴진 운동의 성공이 세월호 운동에도 기운을 줬다. 4월 15일과 16일 서울과 안산 등 전국에서 열린 기억식에 수만여 명이 참석했다. 홍준표를 제외한 주요 대선 후보들이 안산에서 열린 3년 기억식에 참석했다.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모두 진상 규명을 약속했고,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후보는 “책임자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년 동안 고통을 무릅쓰고 묵묵히 싸워 온 유가족들과 이들을 지지하면서 함께 싸워 온 이들이 만들어 온 결과다.

퇴진 운동의 결과로 원래 일정보다 아홉 달이나 당겨져서 출범할 차기 정부는 세월호 운동의 요구를 가장 먼저 마주쳐야 할 것이다.

이미 지난해 누더기 특별법과 정부의 방해로 손발 묶인 특조위를 경험한 만큼, 제대로 된 기구를 구성하라는 요구가 더 거셀 것이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세 후보 모두 2기 특조위를 설립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 실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릴 것이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어서 실제로는 2기 특조위 구성 과정부터 특조위의 권한 등을 놓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은 특조위에 “사실상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 법안에 따르면

특조위는 특검 추천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2014년 유가족들이 원래 요구한 특별법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명하게 포함한 것이었다. 구성도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 중심으로 하게 돼 있었다. 이 요구는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제안해 6백만 명이 서명했다. 당시에 민주당(당시 당명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소권 보장 요구를 거부했다.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세 번이나 새누리당과 야합해 유가족들의 뒤통수를 쳤다.

세월호 참사 당시 새정치연합은 안철수가 공동대표, 박영선이 원내대표였다. 7월 재보선 패배 후 안철수가 사퇴한 뒤에는 박영선이 비대위원장, 문재인이 비대위원을 했다. 누구도 책임을 피하기 힘든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

그러나 민주당은 현실에서 가능한 걸 쟁취해야 한다며 자신들 임의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뺀 특별법 제정 협상을 했고, 끝내 그렇게 합의했다. 민주당은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이 더 늦어지면 진상 조사가 어려워진다고 누더기 합의를 정당화했지만, 박근혜는 그 법의 불철저함과 허점을 이용해 시행령으로 한층 더 그 법을 약화시켜 버렸다.

결국 특조위가 없는 권한으로 애를 쓰긴 했으나, 바라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민주당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고, 진지한 사과조차 없었다.

더 한심한 일은 그 뒤다. 세월호 민심 등이 배경이 돼 2016년 4월 총선에서 박근혜가 참패하고 세월호 참사 당시 제1야당이던 두 당이 절반을 넘었지만, 어처구니없게도 세월호 특조위는 바로 그 여소야대 상황에서 손도 못 써보고 해산됐다.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독립기구를 보장하는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할 때, 문재인은 동조 단식을 하기도 했다. 박영선의 첫 야합 시도에 비판이 거세져 문재인은 유가족들의 동의가 중요하다는 이를 비판했지만 결국 박영선이 최종 야합 안을 갖고 왔을 때 이를 수용했다. 자신이 “유족들을 설득하겠다”며 후퇴한 것이다.

민주당은 특조위의 특검 요청 권한을 대단한 것인 양 포장했지만 결국 특조위 활동 기간 내내 한번도 특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특조위가 보도 통제의 주범 이정현과 김시곤을 고발했지만, 검찰 수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조위가 연 청문회에 정부 요직들은 대거 불참하거나 ‘모르겠다’,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식의 말 맞추기로 일관했다.

민주당은 그해 12월에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거나, 친박 활동을 해 온 자들을 특조위원으로 추천했을 때 얼렁뚱땅 국회에서 통과시켜 준 책임도 있다. 문재인은 2015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당 대표였는데 이 시기 특조위가 정부의 온갖 방해에 시달렸지만 민주당은 목소리만 높이다가 슬그머니 그만두기를 반복했다.

문재인의 공약인 ‘세월호와 가슴기진상규명 및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이라는 문구도 모호하다. 합의 도출이라니?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참사들인데 말이다. 사드 배치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내세운 것과 겹쳐 보인다. 즉, 합의라는 명목으로 해결을 질질 끌고 피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삭감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안철수는 특조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한다. 여전히 수사권과 기소권은 없는 것이다. 주요 공약에서 세월호에 대한 직접적 언급도 없다.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국민의당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가장 먼저 입박에 꺼냈지만 안철수는 “민생이 우선”이라고 했다. 여소야대가 됐지만 결국 세월호 특별법 개정은 국회에서 다뤄지지 못한 채 특조위는 문을 닫았다. 안철수는 최근 3년 기억식에서 방명록을 남기며 낱말 몇 번이나 물어 빈축을 사기도 했다. TV토론에서 세월호 배치를 달지 않는 이유가 “대통령 후보라서”라고 답변하는 것도 오른쪽을 붙잡으려는 안철수의 전략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나마 내놓은 약속들에서 진정성을 보기 힘든 이유다.

안전 사회 건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0대 주요 공약에 세월호 진상 규명 등 안전사회로의 전환 등을 내걸었다. 2기 세월호 특조위 구성과 안전사회전환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 했다. 참사가 일어난 2014년 7월 재보선에서 정의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야합하자 “무늬만 특별법을 폐지하라”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심상정 후보는 피해자 가족들과 관련 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지난 16일 안산 기억식에서는 ‘수사권이 부여된 특조위와 필요시 특검’을 약속했다.

한편, 세 사람 모두 선관위에 등록한 10대 공약에서 “재난”에 대한 정부 대응 강화 관련 공약을 포함했다. 소방청과 해경에 대한 인력 충원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인력 충원에 더해 처우 개선도 이뤄져야 하는데, 예산을 크게 늘려 소

방직의 국가직 전환과 처우 개선, 장비 지원 강화 등을 분명히 한 것은 심상정 후보뿐이다. 특히 심 후보는 안전 업무의 외주화 중단과 위험 업무 정규직화도 말하고 있다. 그는 2015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공동발의하기도 했다.

‘세월호 이후는 달라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민영화와 규제 완화는 세월호 참사의 배경이었다. 그러나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규제를 물에 빠뜨려 살릴 것만 살려야 한다는 끈찍한 말을 내뱉었고,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을 통과시키려 혈안이 돼 있었다. 사실 이 두 법안은 “쌍둥이” 법안으로 대기업들이 박근혜에게 요청한 숙원 사업들이다.

그런데 문재인과 안철수는 모두 규제 완화와 민영화 반대에 불철저하다. 2015년에 문재인은 민영화를 확대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놓고 박근혜를 만나 보건 의료 부분만 빼고 통과시키자는 통 큰 양보를 약속하기도 했다.

최근 안철수는 규제프리존을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는데, 문재인도 박근혜식 법안이 문제라는 태도여서 완전 폐기를 주장하는 심상정 후보와는 확연히 다르다. 심 후보는 ‘규제프리존은 이 나라 전체를 세월호로 만드는 법’이라고 주장한다.

세월호 참사는 이윤이 생명보다 우선한 체제와 그 체제를 수호하는 국가의 끈찍함을 보여 줬다. 따라서 이런 우선순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졸부세 공약을 만든 김광두를 영입하고 홍석현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문재인이나 “반기업 정서는 실체가 없다. 기업이 무슨 죄가 있나?”는 기업주 안철수가 결코 이윤 우선 시스템을 손보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 자신이 기업주들에게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대중 운동의 힘으로 차기 정부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관련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서평 | 《재난을 묻다》

국가, 늘 권력자·가해자의 편에 섰던

참사의 공범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자임이 땃땃하다는 후보에게 투표하라

민중의 힘으로 박근혜를 쫓아내고 치르는 대선이 눈앞에 닥쳤다. 우파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다. 1987년 6월항쟁의 성과물 중 하나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우파가 가장 힘겹게 치르는 대선이다. 노동자들은 9년 동안 지속된 우파 정권을 대선에서 갈아치우고 싶어 한다.

우파는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으로 크게 타격을 입어 사분오열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크게 분열해 각각 출마했고, 그보다 자잘한 분열도 있어, 조원진, 남재준, 이재오도 따로 출마했다. 이 자들은 모두 2007년과 2012년 대선에서는 같은 편이었다.

일부 우파들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후보 단일화' 군불을 지핀다. 그러나 (그래도 당선이 쉽지 않은데다) 우파의 차기 맹주 자리를 서로 노리고 있어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우파의 반격을 허투루 볼 수는 없다. 제 판에 멀리 보고 흥준표는 시장 지상주의, 노동조합 적대, 반북, 동성애 반대, 사형제 찬성 등을 핵심 이슈로 골라 집요하게 제기한다. 그 덕분에 핵심 우파 지지자들이 얼마간 흥준표 주위로 결집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우파의 '색깔론'이 먹히지는 않고 있다. 주로 촛불 운동의 변화 염원 정서가 선거에서도 도도하게 유지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성소수자나 사드 배치 문제에서 보듯이 문재인과 안철수가 우파에 기꺼이 적응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류 야당들

촛불 운동의 변화 염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되게 정권 교체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신년 여론조사들에서 국민의 80퍼센트가 정권 교체를 지지했다.

그러나 주류 야당 후보들의 선거 운동은 촛불 운동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 아예 "촛불 민심"에 역행한다.

국민의당 후보 안철수는 우파의 지원을 받아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한다. 우파의 환심을 사고자 사드 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섰다. 안철수는 사회 생활의 전부를 대기업 "사장님"으로 지낸 자다. 그래서 시장적 해결책에 충실하다. 그는 문재인인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비판하며 일자리 문제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에 맡기라고 한다. 기업주를 위한 규제프리존법을 지지한다. 그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촛불 운동에 코빼기도 내밀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은 안철수가 되면 진정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는 호남과 보수 표를 동시에 얻으려다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불신 받으며 최근에 지지율이 급락했다.

그렇다고 문재인이 대중의 변화 염원을 속 시원하게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 문재인은 표를 얻으려고 '복지'를 말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얼버무린다. 법인세 인상도 공약하지 않고 있



쌍용차 해고자 복직의 기쁨을 함께 나눈 심상정 후보

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 공약(空約)이다. 2012년에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사드 배치도 슬슬 찬성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문재인은 중도를 고수하려 애쓴다.(파키스탄계 영국 좌파 저술가 타리크 알리는 이를 두고 "극단적 중도파"로 불렀다.)

문재인은 집권도 하기 전에 대중의 변화 기대감을 낮추고 있는 것이다. 경제 위기와 동아시아 제국주의 간 갈등 격화 등 객관적 환경들이 그로 하여금 윤신의 폭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인의 '적폐 청산' 목소리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작아진다.

유럽에서 대중의 불신을 받은 보수정당을 대신해 등장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집권 즉시 마찬가지로 노동계급을 공격하듯이, 문재인 정부도 기업주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계급을 공격할 것이다. 문재인은 결국 '개혁 없는 개혁주의 정부', '개혁을 도로 빼앗아가는 개혁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물론 노동자들의 다수는 문재인에게 투표하는 것 말고 달리 도리가 없다고 느낄 것이다. 당선 가능 후보론, 차악론 등의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선은 수백만 명의 문제가 아니라 수천만 명의 문제가 되므로(전체 선거인은 4천2백만 명이 넘는다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이런 '현실주의'가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노동자임이 땃땃하다는 후보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과 민주당의 '극단적인' 중도 정치를 잘 폭로하고 있다. 그 덕분에 심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급상승했다.(물론 선거가 열흘가량 남았고 선거판을 흔들 변수들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심 후보가 압작당할

요인들이 잠복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4월 19일 2차 TV 토론회가 전기가 됐다. 그 토론회에서 심 후보는 문재인을 분명하게 비판했다. 그것은 또한 자신의 완주 의지 과시이기도 했다. 그전에 심 후보는 문-안 양강 구도 속에 압착돼 중도 사퇴 압박을 크게 받았다. <노동자 연대>가 그동안 심상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밝히지 않은 것도 그의 완주가 다소 불투명했었기 때문이다.

심상정 후보는 "노동이 당연한 나라"를 표어로 삼고 있다. "민주노총과 서로 오해도 생기고 서로 소원해지기도 했다"고 시인했듯이, 심 후보는 지난날에 조직 노동자 운동과 의식적으로 거리 두기를 한 적이 있다. 역사적 통찰을 갖고 길게 내다보지 못한 소치였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노동"에 기반해 진보적 가치와 주장들을 펴며 진보·노동 정치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심상정 후보가 차기 정권의 연립정부(공동정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우려스럽다. 이 경우 정의당이 독자적으로 집권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정부에 하위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이다. 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문재인이 당선해도 머잖아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을 배신하고 노동계급을 공격할 것이다. 이때 정의당이 정부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 배신의 책임을 함께 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유력한 후보 다섯 명 중 한 후보만이 노동계 후보다. 그리고 그는 노동자임이 땃땃하다고 말하고 있다. 나머지 네 명은 선명한 친자본주의 정당 후보들이다. 그래서 <노동자 연대>는 이번 대선에서 노동자들이 그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심 후보에게 투표하려는 노동자들은 문재인에게 투표하려는 많은 다른 노동자들을 적대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노동계 후보에게 투표하려는 소수 노동자들에게도 동지애를 견지해야 함은 말할 나위 없다.

투표 때 노동자들은 <노동자 연대>가 그동안 지적해 온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도 유념해 두길 바란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 정치인의 사회적 기반은 문재인 같은 부르주아 후보와 다르다. 그는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폭넓은 조합원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점에서 심 후보나 문재인이나 별로 다를 게 없다는 조좌파적 입장은 노동운동 속의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저 있으나마나 한 종파주의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일 뿐이다.

다시금 우리는 5월 9일 노동자들과 천대만는 다른 사회집단 성원들이 노동자임이 땃땃하다는 후보에게 투표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사드] 중국의 군사적 대응도 제국주의 간 경쟁의 일부

★ [재난을 묻다]—

국가, 늘 권력자·가해자의 편에 섰던 참사의 공범

★ [인공지능과 언어] 언어는 기계가 따라잡을 수 없는 인간 지능의 토대

★ 건설사들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를 내쳐선 안 된다

★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동진오텍 노동자들

★ [공무원노조 송파지부] 우파적 노조 분리에 대응하는 효과적 방법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 논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온전한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라

이정원

2015년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간 2천2백73시간으로 OECD 국가들 중 최고다. OECD 국가 노동자들의 평균치와 비교하면 한국 노동자들은 연간 두 달을 더 일하는 것이다. 과로사의 기준인 주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노동자도 1백13만 명이나 된다.

더 심각한 것은 2013년 이래로 소폭 이마나 단축되던 노동시간이 최근에 되레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 위기가 지속되자 사용자들은 고용을 늘리지 않고 기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늘려 착취율을 올리려 하는 것이다.

그렇수록 노동자들의 삶은 피폐해진다. 장시간 노동은 질병과 재해 위험을 높이고 정신 건강에도 해롭다. 장시간 노동이 사망률, 심혈관질환, 당뇨병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노동시간 단축이 주는 기쁨은 승진했을 때와 같은 수준이라고 한다.(2016년 프랑스와 포르투갈의 노동시간 단축 효과 평가 연구)

노동시간은 가족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여가 시간은 노동자들이 사회 활동과 정치 활동을 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노동시간이 길어지면 재충전의 필요 때문에 가장 먼저 줄이는 시간이 문화·정치 활동이다.

선결 조건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마르크스는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하나의 선결 조건이다. 그 조건 없이는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모든 시도와 노동자 해방은 실패할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최근 유력 대선 후보들이, 진정성과 내용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두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광범한 사람들이 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방증한다. 물론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추진한 정당의 후보들인 홍준표와 유승민의 공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긴 어렵다. 안철수가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라야 일자리 확대와 실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낸다

‘근로시간계좌제’ 같은 탄력근로제를 제시하는 것도 위험하다.

문재인 후보도 주 40시간제가 아니라 주 52시간제를 실시하겠다고 해 노동시간 단축 공약치고는 궤변이다. 심상정 후보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주 68시간 행정지침이 버젓이 시행된 점을 꼬집으며 노동시간 단축의 지가 있는지를 묻은 것은 타당하다. 심상정 후보는 40시간제를 즉각 전면 시행하고 2022년 이후 주 35시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다른 후보들에 견줘 훨씬 진보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다.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법률과 제도를 고수하는 사용자들과 이를 뒤흔치는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예컨대 노동자 셋 중 하나는 주 40시간제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여러 직업에 법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부는 1주일이 5일이라고 억지부리며 12시간으로 제한한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를 통해 주

68시간(주 40시간+주 12시간 연장근로+16시간 휴일근로)까지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2003년 한국에 주 40시간제(노사 합의 시 주 12시간 연장 노동 가능)가 도입됐지만, 2015년 현재 노동자의 절반 이상(54.2퍼센트)이 실제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한다.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도 3백45만 명(17.9퍼센트)에 이른다.

현재도 노동시간 단축 논란은 온전한 주 40시간제 시행을 가로 막는 조처들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 사용자들과 이들의 이익을 대변해 온 정부는 주 40시간제를 지키지 않아도 면별할 수 있는 기간 설정, 52시간 외에 8시간의 추가 노동 허용, 연장 노동 중 복 합증을 낮추기,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최소화하고 노동시간 유연화를 늘리려 한다.

이런 쟁점들 때문에 지난 3월 국회에서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논란 끝에 처리되지 못했다.

심지어 최근 경총이 발표한 ‘신정부에 바란다. 경영계 정책건의서’에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자

면서 고임금 노동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도 있다.

이런 사용자들의 반발 때문에 새 정부 하에서도 노동시간 단축 추진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면 새 정부의 ‘개혁성’이 시험대에 오를 것인데, 이럴 때 노동자들이 독자적으로 투쟁에 나서야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금, 노동조건 후퇴 없어야

또한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을 강제해 연장근로 시간을 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법 적용 예외인 특례조항만 없애도, 새로운 일자리 62만 개를 만들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더 나아가 실노동시간을 주당 48시간으로 제한하면 일자리 1백5만 개를 만들 수 있다.

일자리 부족으로 고통받는 청년들과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의 처지 개선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효과를 내려면 임금과

노동조건 후퇴가 없어야 한다. 물론 장시간 노동, 특히 교대제와 야간근무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임금 일부가 삭감되더라도 노동시간이 줄고 휴일이 늘어나길 바랄 수 있고, 이는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 기본급이 낮은 임금 체계 때문에 노동자들은 초과근로 수당으로 부족한 임금을 벌충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 삭감을 동반한 노동시간 단축이 추진되면 노동자들은 처지 악화를 수용하거나 또다시 초과 노동에 매달리게 만드는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다. 따라서 기본급이 대폭 올라야 하고 임금 총액이 줄어선 안 된다. 과거 경험을 봐도, 1989년 44시간제가 도입될 때나 2003년 40시간제가 도입될 때는 임금 삭감을 수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은 임금과 고용, 삶의 질에 긍정적 효과를 냈다.

노동강도 강화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 시간이 줄어도 노동강도가 강화되면 근무가 끝나도 녹초가 돼 여가 시간을 제대로 누릴 수도 없게 된다. 게다가 사용자들이 노동강도를 높여 기존의 생산량을 채우면 굳이 고용을 늘릴 필요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본주의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이나 노동조건 유지를 말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가장 유력한 후보인 문재인은 이미 사회적 대화협론을 내세우며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거나 소수의 ‘귀족노조’가 문제라고도 말한다.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 문제에 관해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한다. 그가 기업 책임을 더 강조해 말하는 것은 옳다. 다만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 고임금 노동자’들도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도 말하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은 바로 다른 노동자의 임금 수준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전반적으로 임금 하향 압박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개약 폐기는 지금도 중요한 과제

최근 경총은 ‘안 되는 게 없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정책 건의서를 대선 후보들에게 보냈다. 그 내용은 박근혜가 추진하던 반노동 정책들로 가득 차 있다. 노동 개악(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임금 삭감), 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대폭 규제 완화, 파업 무력화를 위한 대체인력 투입 허용, 직장 절거 금지 등. 심지어 “개인맞춤형 근로계약법”을 제정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동일한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것도 없애자고 한다.

경총의 요구는 기업들의 ‘위시 리스트’이자, 박근혜의 노동개약을 새 정부가 이어 받으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경제 위기와 더 치열해진 국제 경쟁 속에

서 살아남기 위해 사용자들은 더 강경하게 굴 것이므로 노동자들이 조건을 지키는 일도 결코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박근혜가 야심차게 밀어붙인 노동개약은 노동자들의 상당한 반발에 부딪혀 완전히 관철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 하에서 노동자들은 정규직·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임금·노동조건이 후퇴하고 해고 등으로 고통받았다.

경경하게

공공기관에는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가 도입됐고, 공무원에게도 연금개약, 성과급·성과연봉제가 추진됐

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 고용을 늘리겠다는 명분으로 임금피크제를 추진했지만, 총원된 인력은 보잘것없는 숫자에 불과했다. 결국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이 목적이었던 것이다.

취업규칙 일방 변경과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양대 지침도 여전히 살아 있다. 노동조합을 공격하기 위한 단협시정 명령도 추진돼 왔다. 무노조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임금 체계 개편, 저성과자 해고 공격에 직면했다. 조선업에서만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7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지금도 사용자들은 이런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티브로드 정규직 노

동자들은 성과연봉제와 수백 명 해고(희망퇴직 강요)에 맞서 싸우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가 추진한 노동개약을 완전히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금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민주노총은 새 정부 출범 후 노정교섭을 통해 양대 지침 폐기 등 새 정부의 행정 조치로 되돌릴 수 있는 사안들은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진보정당의 후보들을 제외한 자본주의 정당 후보들은 노동개약 폐기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 홍준표·유승민은 말할 것도 없고, 안철수는 직급제 추진 등 노동개약의 일부 내용을 수용한다. 문재인은 성과연봉제와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지만,

구체적인 이행 시기와 방법은 침묵한다.

따라서 지금부터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같은 요구들과 함께 노동개약 폐기를 내걸고 싸워 나가야 한다. 특히 민주노총의 6월 30일 파업에서도 성과연봉제와 노동개약 폐기, 구조조정 중단 등도 함께 내걸고 파업 동참을 조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야 새 정부가 노동개약을 폐기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와 노동개약을 밀어붙이려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동요할 때, 실질적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정원

기아차 노조 분리 총회의 교훈

박설

원통하게도 기아차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분리 총투표(총회)가 가결됐다. 노동운동 안팎에서 총투표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김성락 집행부는 눈과 귀를 막고 강경하게 밀어붙였다.

많은 언론이 말하는 것과 달리, 이번 결과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버린 사건'이 아니다. <노동자 연대>가 애초부터 강조했듯이 문제는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노동조합 지도부가 원하청 노동자 전체를 상대로 벌인 노골적 퇴행이었다. 즉, 노동조합 지도부의 관료주의 문제였다.

물론 투표 대상자의 90퍼센트 이상이 정규직이었고, 비정규직의 다수가 반대표를 찍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서 찬반 양론이 갈리고 첨예한 투쟁이 벌어졌던 점을 봐야 한다.

그리고 진정 중요한 점은, 이번 총투표의 성격은 무엇이었는지, 이 투쟁에 어떤 기회가 있었고 어느 지점에서 그것이 가로막혔는지, 그로부터 이끌어 내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일일 것이다.

총투표의 성격

올바른 평가를 위한 첫 출발은 총투표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 기아차지부의 많은 활동가들은 초반에 총투표 중단을 촉구하다가, 막상 투표일이 가까워지자 투표에 참가해 반대표를 찍자는 쪽으로 바뀌었다. 전직 위원장단, 대부분의 “현장”조직들과 대의원들이 그랬다. 이들은 대체로 조합원 총투표라는 형식 절차를 민주주의로 착각하거나 모종의 “공인된 가치”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총투표는 결코 민주적이지 않았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단순한 형식 절차 문제로 환원하지만,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은 이런 형식 논리를 반대한다. 민주주의는 노동계급의 자주적 활동·운동·투쟁, 즉 노동자 투쟁이 강력해지고 단결이 강화되는 것을 뜻한다.

지난 몇 해를 돌아보면, 기아차 노동자들은 정부와 사측의 공격 속에서 임금 인상률이 억제되고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등 불만을 쌓아 왔다. 노조 집행부는 사측의 공세에 단호하게 맞서기보다 양보와 배신을 거듭하며 노동자들이 진 빠지게 만들고 사기를 떨어뜨렸다. 안타깝게도 좌파적 구심도 상당히 취약해졌다.

더구나 사측은 비열하게도 ‘비정규직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기아차주의 직원이 아니니 성과급을 깎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간질하며 비정규직의 조건을 더한층 공격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성락 집행부는 현장 조합원들의 불만을 악의적으로 비정규직 투쟁에 돌리며 사측의 이간질 공격에 타협했다. 노동자들 사이에 연대의식을 갈아먹고 보수성을 부추겨 온 것이다. 이번 총투표는 그 절정이었다.



총투표에 반대하며 노조 지도부에 항의한 기아차 활동가들 단호하게 투표 보이콧을 선행했다면 투쟁의 파장은 더욱 컸을 것이다

따라서 총투표는 노동계급의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었다. 따라서 총투표 자체를 거부해야 했다.

총투표를 막을 기회는 있었다

되새겨 볼 만한 사례가 있다. 2010년에 현대차지부 이경훈 집행부는 현대차 비정규직 점거파업에 대한 금속노조의 연대파업 지침을 회피하려고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했다. 그 목적은 명백히 파업 파괴였다. 노동자들은 이를 “자살 총회”라고 불렀다.

2011년에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이 추진한 ‘무상급식 주민투표’도 목적이 사악했다. 그는 ‘왜 노동자·민중의 복지에 세금을 쓰느냐’며 기업주·부자들의 편에 서서 무상급식을 없애자고 했다.

그런데 이 두 경우에서 운동의 대응은 상반됐다. 현대차에서는 모든 “현장”조직들과 좌파 단체들이 “자살 총회” 거부가 아니라 투표에 참여해 파업 찬성표를 던지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경훈은 투표함을 개봉하지 않은 채 (“어차피 1백 퍼센트 부결”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압박해 점거 해제를 관철시킬 수 있었다.

반면, 오세훈에 맞선 운동의 대응은 단호했고 효과적이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해 대대적으로 보이콧을 선동했다. 그 결과 실제 투표율이 단 25.7퍼센트밖에 되지 않아 투표가 무

산됐다. 오세훈이 참패하는 궤거를 이뤄 낸 것이다.

이번 경우에도 투표를 무산시키는 게 불가능하지 않았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중앙집행위원회, 정의당, 노동운동 단체들, <한겨레> 등이 모두 총투표를 하지 말라고 했으므로, 정치적 명분과 대의는 충분했다.

더구나 화성 공장의 좌파 대의원·활동가 20여 명은 투표함이 돌지 못하도록 8시간 가까이 총투표 저지 행동을 벌이며 끝까지 분투했다. 유감스럽게도 장재형 화성지회 집행부가 힘으로 투표용지를 빼돌렸지만 말이다.

만약 전직 위원장단과 주요 “현장”조직들, 사내하청분회가 모두 힘을 합쳐 보이콧을 선동하고 총투표 저지 행동에 나섰다면, 그 효과와 파장력은 매우 컸을 것이다. 주요 “현장”조직들에 속한 대의원단 전체의 과반이었는데, 이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면 투표율을 절반 밑으로 떨어뜨릴 수 있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다수가 비효과적인 투표 참여 전술을 택했던 탓에, 사측이 총투표에 개입해 들어올 틈이 생겼다. 사측은 관리자들을 적극 동원해 투표를 독려하는가 하면, 생산관리자 협의회를 앞세워 총투표 저지 행동에 나선 몇몇 활동가들을 꼭 집어 비난했다. 투표에 불참하면 ‘골수분자’가 되는 것이라고 낙인 찍어 노동자들을 위축시키고 투표장으로 끌어내려 한 것이다.



화성 공장에서 투표함을 막으며 연좌농성한 정규직 활동가들

노조 상층 지도부의 보수성

이번 총투표 가결로 가장 기쁘게 웃고 있을 이는 정몽구일 것이다. 이미 현대·기아차 그룹사는 총투표 가결을 기회 삼아 대대적인 공격에 나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지부, 현대차지부를 포함한 정규직·대기업 노조들이 사회적·정치적으로 고립될 것”이라고 진단하고는, 노동조건에 관한 노조 개입을 “경영권 침해”로 규정해 약화시키고, “귀족노조” 비난으로 재벌을 향한 공격을 “희석”시키고, 임단투를 공격하겠다고 했다. 당장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 전환의 꿈을 버리고 신규채용에 무릎 꿇으라고 강요할 것이 뻔하다.

이는 몇 해 전부터 수익성 하락에 처하고 특히 올해 들어 위기가 더 심해진 사측의 처지를 반영한다. 현대·기아차는 최근 사드 배치의 여파로 중국 판매량이 급감했다. 지난달에만 52퍼센트 넘게 줄었다. 1분기 예상영업이익률도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13.8퍼센트, 23.3퍼센트씩 줄었다.

현대차의 차량 결함을 폭로한 내부 고발 사건도 사측에게 골칫거리다. 도요타, 폭스바겐 등이 대규모 리콜 사태로 치른 홍역을 떠올리며 발을 동동 구르고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같은 경제 위기는 노조 상층 지도자들을 더 한층의 보수성으로 내몰기 십상이다. 노조 지도부는 사측과 노동자들 사이를 줄타기 하며 타협(협상)을 중재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 위기가 심해지면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그동안 누린 특권을 잃을까 봐 속을 태운다. 만약 아래로부터 노동자들의 압력이 강력하다면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 압력이 달하면 정치적 타락 속도가 빨라지고 노골적으로 보수화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성락 집행부의 퇴행은 단순히 그 집행부만의 돌출 행동이 아닐 수 있다. 세계경제가 불황에 빠진 2009년에도 노조 지도자들의 후퇴가 잇따랐던 것을 보면 말이다.

소수지만 단단한 혁명가 조직

그렇다면 이런 노조 상층 지도자들의 보수성(개량주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실 이는 지난 십수 년간 좌파가 해결하지 못하고 거듭 발목이 잡혀 온 핵심 문제이기도 하다. 이번 투쟁에서 기아차지부의 전직 위원장단과 주요 “현장”조직 리더들이 보인 소극성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일단 김성락 집행부를 배출한 ‘금속노동자의 힘’(이하 금속힘)의 다수 활동가들은 노조 분리에 반대했지만, 정작 노동운동의 대의를 배신한 김성락을 자기 조직에서 제명하지 못하고 찢절했다. 화성·소하리·광주·판매·정비 등 전 지회 집행부들이 모두 금속힘이지만, 이들이 총투표를 거부하도록 강제하지도 격렬히 저항하지도 못했다.

다른 주요 “현장”조직 리더들도 과거 집행부 시절 그 자신이 신규채용 합의 직접 추진했거나, 양보 교섭으로 현장 조합원들의 커다란 반발(예컨대, 교섭장 봉쇄 투쟁 등)에 직면하곤 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관료적 질서, 형식 절차 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

주요 “현장”조직 리더들이 김성락 집행부에게 대의원대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총투표를 막겠다는 헛발질에 공을 들이다가, 이것이 거부되자 총투표에 참가해 반대표를 찍자는 소심한 전술로 나아간 이 유다.

많은 현장의 투사들이 노조 관료주의에 얽매게 된 것은 2000년대부터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안착되고 현장 투쟁이 약화되면서 사기가 낮아지고 시야가 협소해진 탓이다. 아래로부터 노동자 투쟁을 건설하는 데 주력하기보다 노동조합의 지도권을 잡고 사측으로부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달콤한 유혹에 이끌렸던 것이다. 그렇게 집행부를 잡으면, 자신이 배출한 지도부를 감싸고 떠받치는 데 급급해 점점 더 온건화되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이런 문제를 극복할 대안은 소수지만 굳건한 혁명가들의 조직을 기층에서 구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좌파적 원칙에 입각해 노동자 단결을 위한 전술을 내놓고 투쟁을 조직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번에 노동자연대 기아차모임은 가장 먼저 총투표 중단을 촉구하며 비정규직 투쟁을 한 치의 유보 없이 지지하고 방어했다. 작은 틈나바퀴였지만 효과적으로 조직돼 있던 덕분에, 초기에 보수적 조합원들의 정서에 타협해 양비론을 퍼거나 입장 발표조차 머뭇거리던 “현장”조직들과 대의원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효과를 냈다. 비록 아직은 세력이 크지 않아 다수 활동가들이 보이콧 전술을 채택하도록 이끄는 데서는 시간상 역부족이었지만 말이다.

노동자 단결은 만고의 진리이지만, 그것은 저절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단단한 혁명가들이 투쟁 속에서 입증해 내고 쟁취해 내야 할 과제다.

과거는 미래의 어머니?

박근혜 4년 동안 입으로만 반대해 온 민주당

김문성

경북 성주 소성리 골짜기에 사드가 배치됐다.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기습이었다. 어김없이 경찰 폭력도 벌어졌다. 박근혜 4년 동안 자주 보던 모습이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노동 개악 지침,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전교조 법외노조화, 진보당 해산 등등.

그저 반대를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생각만 한 황교안 내각은 박근혜가 없어도 악행을 이어갈 것이었다. 박근혜 파면 뒤에도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 신문의 경고가 옳았던 이유다.

황교안은 주류 야당들이 진지하게 그 악행들에 반대하지 않을 거라는 계산을 했을 것이다. 안철수는 아예 사드 배치 찬성으로 돌아섰고, 문재인은 소극적으로 차기 정권에 넘기라는 말만 해 왔다. 민주당은 집권 전에 끝치 아픈 일이 처리돼 내심 안도하고 있을 것이다.

이 당들도 자본주의 수호를 굳게 다짐해 왔으므로 심각한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미국의 군국주의 정책에 이해관계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촛불 운동이 박근혜를 중도 퇴진시켜 처리하는 대선인데도 문재인·안철수는 우파의 의제를 수용해 안보를 강조해 우파의 기를 살려 주고 있다.

퇴진 운동을 승리로 이끈 대중은 제대로 된 정권 교체를 기대할 자격이 있는데, 차기 정권이 그에 부합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진주의료원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첫해부터 별 도움이 안 됐다. 그해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려 해 반대 운동이 일어났을 때 홍준표는 적자와 강성 노조 맞을 하며 여지를 부렸다.

가난한 중환자들을 위한 의료시설을 폐쇄하기도 전에 대책도 없이 그들을 퇴원시켜 버리는 상황을 막으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 노동자들은 집요한 압박에 못 이겨 수십 명이 스스로 그만두고 임금 체불을 감수했다. 진짜 강성으로 나온 것은 홍준표였다. 따라서 필요했던 건 공공서비스를 지켜 낼 강성노조였던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진주의료원 폐쇄에 반대한다면서도, 우파가 공공 병원 재정적자나 강성노조를 문제 삼는 논리를 받아들였다. 여론을 설득하지도 못했고 싸우는 노동자들에게 힘을 주지도 못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친박계 인사였던 진영은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홍준표의 조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 뒤 진영은 박근혜에 밀려버려 탈당한 뒤, 환원을 받으며 민주당에 입당해 국회의원이 됐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민주당 소속으로 전북도지사를 하던 김완주도 홍준표처럼 적자 경영과 노조를 문제 삼으며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를 폐쇄하려



'표 도둑' 여소아대를 만들어 했지만 약속을 안 지킨 민주당. 지난해 8월 25일 민주당사 정치 농성에 들어갔던 세월호 유가족과 백남기 대책위

했다.

당시 보건의료노조 남원의료원지부 이용길 부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이 진주의료원 폐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전라도에서 민주당은 새누리당보다 더 악질입니다."

지역 내 반박이 커 겨우 유지된 두 의료원은 메르스 확산 때 전북 내 대학에 큰 구실을 해, 공공의료가 내는 '착한 적'의 중요성을 보여 줬다.

그러나 민주당은 부자들을 위해서 증세는 웬만하면 피하고 공공부문 임금을 삭감하라는 축소하려 한다는 점에서 새누리당과 견해가 같았다. 그래서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것에도 불철저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지방정부에서는 공공부문 축소를 추진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안철수와 문재인은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후보의 일원이었다. 참사 초기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책임을 둘 다 피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당시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라는 운동의 요구를 민주당

이 나서서 운동 내부를 설득해 좌절시켰다는 것이다. 협상을 위해서는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말이다.

다행히도 운동은 이력저력 유지돼 왔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분노는 박근혜 퇴진에도, 여소아대의 총선 결과에도, 지금 민주당이 우세한 대선 상황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지난해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여소아대였는데도 속도 못 쓰고 특조위가 해체되는 걸 지켜봐야 했다.

2012년 대선 직후,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물론 국가기관들이 총체적으로 대선에 개입해 박근혜 당선을 도운 공 두리당을 반대하는 것에도 불철저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지방정부에서는 공공부문 축소를 추진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안철수와 문재인은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후보의 일원이었다. 참사 초기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책임을 둘 다 피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당시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라는 운동의 요구를 민주당

이처럼, 민주당은 박근혜의 온갖 나



올해 1월 11일 성주·김천 주민들의 민주당사 정치 농성

쁜 정책들의 동력을 약화시킬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 기업주들의 전폭 지지를 받고 집권한 박근혜의 중점 기조에 민주당도 반대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진보당 탄압은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명백히 반(反)자유주의적 조처였는데도,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편을 들었다. 민주주의 권리 문제에서조차 일관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것도 노동계급 조직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맞서 직·간접 탄압을 감수하며 저항을 지속해 온 것은 노동자 운동이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아래서는 조직 노동자 운동이 그 선두에서 왔다.

민주당은 저항이 일어나면 적당히 정권 반대편에 섰다가 '정치적 해결'(여야 협상)이라는 명분으로 운동을 무마하고 관리하려 하고, 그런 시도가 통하면 그 것을 지렛대 삼아 집권당과 적당히 주고받는 식으로 행동했다.

기업주들이 강력히 요구한 문제들에서는 현실론을 앞세우며 오히려 노동운동이 개악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데에 앞장섰다.

노조 상층 지도자들은 소심함과 전투적 투쟁 회피주의 때문에 흔히 공식 정치권에서의 우군 형성을 중시한다. 대중의 투지를 고양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민주당 측의 지지와 민주당이 대리하는 여당과의 협상에 자주 의존하려 한다. 그러나 언론 파

업, 철도 파업,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에 맞선 투쟁 등에서 보았듯이 빈번이 기층 대중의 투쟁 잠재력만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2009년 말 이명박 정부가 노동법을 개악할 때, 국회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듯하다가 결국 앞장서 개악 통과에 협조하며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친 자가 지금의 민주당 대표인 추미애다.

민주당은 자신도 보수 언론의 폐해라고 말하지만, 이명박의 언론 장악에 맞서 MBC, YTN 등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을 때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2012년 4월 MBC 파업 때는 총선에서 보수 유권자의 표를 얻지 못할까 봐 여러 경로로 파업 종료를 종용했다. 그래 놓고도 총선에서 패배하자 민주당은 '좌절력이 패인'이었다며 약속들을 저버렸다. 그렇게 호지부지 투쟁을 점교 사기가 떨어진 결과가 지금의 MBC다.

결국 운동이 '차기 정권에서 해결하자, 선거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주장을 받아들여 민주당에의존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억제할수록 노동계급의 의식과 조직이 성장하는 것이 방해받는 다. 진정한 개혁 동력이 약화된다.

2016년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막무가내 불법 도입이 정점이 됐을 때, 민주당은 공공·금융기관 8곳을 현장 조사해 실태를 발표했다. 그러나 그걸 말고 실질적으로 한 일은 없다. 여소아대인데도 노동부장관 물러나라는 소리조차 정치권에서의 우군 형성을 중시한다. 대중의 투지를 고양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민주당 측의 지지와 민주당이 대리하는 여당과의 협상에 자주 의존하려 한다. 그러나 언론 파

업, 철도 파업,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꺾고쉬워하다가 파업을 종료시키는 데에 애를 썼다. 정권 퇴진 운동의 물꼬를

튼 철도 파업은 노조 지도자들과 민주당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현장 노동자들이 두 차례 저항을 했지만) 결국 종료됐다. 민주당은, 박근혜 퇴진 운동과 조직 노동자들의 대중 파업이 결합할까 봐 우려한 기업주들의 격정을 해소하는 것을 더 중시한 것이다. (당시 정의당이 이에 동참했던 것은 크게 유감이다.)

요컨대, 노동자 파업에 민주당은 '말리는 시누이' 역할만을 했을 뿐이다. 이런 '입 지지'아말로 민주당 식 패배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때는 지지한다고 다와서서는 개악 수용을 종용했다.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정권에 맡기고 기다리기만 해서선 절대 안 되는 이유다. 결국 박근혜를 쫓아낸 힘은 대중이 스스로 투쟁을 이어간 것임을 두고두고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노동자들이 대(對) 정부 투쟁을 벌이고 개혁 정부를 약화시켜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타개할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파시즘 운동이 히틀러나 무솔리니의 원형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가망이 없다며, 변화할 상황에 맞게 더 유연한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노동자들이 대(對) 정부 투쟁을 벌이고 개혁 정부를 약화시켜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타개할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파시즘 운동이 히틀러나 무솔리니의 원형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가망이 없다며, 변화할 상황에 맞게 더 유연한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요한 것은 노동자 투쟁이 더 투쟁적으로, 더 좌파적으로 진전해 세력균형을 바꾸고 진보·좌파의 정치적 대안에 힘을 높이는 일이다.

프랑스 국민전선의 역사를 통해 본 나치 본색

김종환

프랑스 나치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이 5월 7일 치러지는 대선 결선에 진출한다. (본지 205호 기사 '나치 르펜이 결선에 진출한 프랑스 대선을 참고하시오.)

2002년 이후 15년 만의 일인데 15년 전과는 정치 지형이 사뭇 다르다.

15년 전에는 국민전선 후보(마린 르펜의 아버지이자 국민전선 창립자 장마리 르펜)가 결선에 진출한 것이 놀라운 이변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거의 모두가 여러 달 전부터 국민전선의 결선 진출을 예상했다.

무엇보다 국민전선의 부상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15년 전보다 덜하다. 역대 최다인 7백70만 명(21퍼센트)에 달하는 국민전선 투표자들은 더 공공연하게 투표 사실을 드러낸다.

이런 변화는 단기간에 생긴 것이 아니다. 지난 십여 년 동안 프랑스 주류 정치권이 인종차별과 무슬림 혐오에 타협한 결과다. 주류 정치권이 2004년 공공장소에서 무슬림 여성들의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법을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편, 2011년 아버지한테서 당권을 넘겨받은 마린 르펜이 유대인 차별 발언을 반복하는 자기 아버지를 2015년에 제명하는 등의 제스처를 취한 것도 이미 지 개선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됐다.

탄생과 중혁

그러나 국민전선은 탄생부터 지금까지 파시즘 운동의 재건을 목표로 하는 나치 조직이다.

제2차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 편에 서서 레지스탕스를 소탕하고 히틀러의 무장원위대에서 활동한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1960년대 프랑스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고 강력한 지도자가 이끄는 나라를 건설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프랑스 노동계급이 1960년대 동안 활성화되면서 나치가 영향력을 키우기 어려웠다. 홀러코스트가 폭로된 상황에서 공공연히 나치를 자처하는 것도 문제가 됐다.

제2차세계대전 중 나치 점령 세력에 적극 부역한 집안 출신자 도미니크 베네는 이런 상황을 타개할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파시즘 운동이 히틀러나 무솔리니의 원형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가망이 없다며, 변화할 상황에 맞게 더 유연한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공한 폭력 사용을 자제하고, 주류 보수 세력의 외피 속에 숨어서 세력을 키우는 법을 익혀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나치 이론가 프랑수아 뒤푸아는 이 전략을 더 정교하게 다듬었다. 그는 소총파를 벗어나 주류 우파로 침투하려면 무모한 폭력을 잠시 삼갈 뿐 아니라, 선거를 이용해 지지자들을 획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치라는 딱지가 붙으면 주류 사회에서 배제될 것이므로, 공공연하게 나치를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혁명 조직(자신들을 일컫는 말)은 활동 자체가 아니라 목적에 의해 결정된다. 수단은 환경에 맞게 바뀔 수 있어야 한다."

국민전선은 이런 전략에 따라 각종 극우 세력이 결집해서 1972년 전선체로 창립됐다. 장마리 르펜이 이 연합체의



마린 르펜은 '정장 입은' 나치다

초대 대표였다. 그는 1956년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인물이자, 이후 알제리 독립 운동 집안에 참가한 장교이자, 히틀러 연설 등을 담은 음반을 판매하는 사업을 벌인 인물이었다. 극우 세력을 모으고 국민전선을 주류 우파 정치권 일부와 연계를 맺게 할 적임자였다.

장마리 르펜은 이 전략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국민전선의 초창기 이론가 뒤푸아가 폭탄 테러로 죽은 지 40년이 다 돼 가는데, 르펜은 해마다 핵심 간부들을 이끌고 그의 묘를 찾았다.

한편 정계를 떠났던 베네는 2013년, 동성결혼 허용을 반대한다며 광범 명소에서 공개적으로 권총 자살을 했다. 당권을 아버지한테서 넘겨받은 마린 르펜은 그를 이렇게 기렸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지지자들은 전투적 행동과 전투를 위해야 하고, 거리에서 우리의 주장을 외쳐야 하고, 남들이 우리의 행동대원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규모와 결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럴 때 우리의 지지자들은 전투적 행동과 전투가 어떤 것인지 느끼고, 더는 고립된 활동가로 방치되지 않을 것이다."

말과 "정치적으로 절교"했다던 장마리 르펜은 이번 대선에서 선거 자금을 6백만 달러(70억 원)나 지원했다. 2012년 대선에서 마린 르펜의 선거 자금을 조달하는 등 국민전선의 재정에 깊게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레드릭 사티용은 히틀러 탄신 기념일에 축하 파티를 열고 참가자들에게 강제수용소 유대인 복장을 입고 오도록 한 인물이다.

또한 2012년 총선에서 국민전선이 주도한 선거연합이 공천한 후보들 가운데는 폭력적 극우 성향자, 홀러코스트 인복장을 입고 오도록 한 인물이다. 또한 2012년 총선에서 국민전선이 주도한 선거연합이 공천한 후보들 가운데는 폭력적 극우 성향자, 홀러코스트 인복장을 입고 오도록 한 인물이다.

르펜 부녀는 종종 '말 실수'를 가장해 홀러코스트를 우호적으로 언급한다. "홀러코스트는 제2차세계대전의 사소한 세부 사항에 불과하다"(장마리 르펜), "비시 정부 시절 유대인을 체포해 강제

수용소로 넘긴 것은 프랑스가 사과할 일이 아니다"(마린 르펜). 이런 발언이 있을 때마다 국민전선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빚발친다. 그러나 이런 발언은 일부 외곽 지지자는 잃을지 몰라도 핵심 당원들은 더욱 결속하는 효과를 낸다.

이렇게 여전히 국민전선의 핵심부에는 끝수 나치가 자리잡고 있다.

이중 전략

국민전선은 이데올로기뿐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도 당원들을 결속시키려 한다. 창당 당시의 문건은 이렇게 쓰고 있다. "아직 우리는 지지자들이 당국의 허락에 연연하지 않고 가두 시위를 벌일 수 있도록 훈련하지 못했는데, 아주 중요한 과제다. 단지 우리 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우리의 힘을 외부로 보일 수 있어야 하고, 거리에서 우리의 주장을 외쳐야 하고, 남들이 우리의 행동대원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규모와 결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럴 때 우리의 지지자들은 전투적 행동과 전투가 어떤 것인지 느끼고, 더는 고립된 활동가로 방치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행진과 시위를 통해 지지자를 결속하는 것은 파시즘의 핵심 특징으로서, 히틀러가 《나의 투쟁》에서 강조한 바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지난 해 국민전선이 프랑스를 찾은 난민들에 항의하는 시위를 여러 도시들에서 벌인 것은 이런 효과를 노린 것이다. 심지어 국민전선은 좌파에 도전하고 강경한 간부를 육성하려고 오래 전부터 노동절에 독자적 가두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

근래에는 선거를 통한 외연 확장에 치중하면서 직접적인 폭력 사용은 자제하고 있지만, 국민전선 산하의 '보안 서비스' 부서에는 각종 무기로 무장한 강한 세무 사령에 불과하다(장마리 르펜), "비시 정부 시절 유대인을 체포해 강제

수용소로 넘긴 것은 프랑스가 사과할 일이 아니다"(마린 르펜). 이런 발언이 있을 때마다 국민전선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빚발친다. 그러나 이런 발언은 일부 외곽 지지자는 잃을지 몰라도 핵심 당원들은 더욱 결속하는 효과를 낸다.

이렇게 여전히 국민전선의 핵심부에는 끝수 나치가 자리잡고 있다.

보여 준다. 이자들은 상황이 변하면 돌격대로서 이주민과 노동조합원들과 좌파들을 공격할 것이다.

국민전선은 투표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당과 구별되는 유관단체들을 두고 있다. 예컨대, 인종차별적 폭행을 일삼는 극우 청년 조직, 정체성 블록(BD)이 있다. 흔히 이 조직의 지역 책임자는 국민전선 소속 지방의원이 된다.

광범한 지지층이 겹겹게 하지 않는 것도 국민전선에 중요하다. 그래서 한 역사가가 폭로한 국민전선 내부 교육자료는 이렇게 쓰고 있다. "우리가 사람들을 유혹하려면 그들을 겁주지 안 된다. … 모든 말은 똑같은 힘을 담고서도 얼마든지 대중이 받아들일 주류 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 예컨대, '깡통이들을 바다에 내던지자'라고 말하지 말고 '제3계 이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조직해야 한다'고 말하자."

국민전선이 무슬림 혐오를 부추기는 방식이 바로 이렇다. 자신은 인종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합리적으로 종교를 문제 삼는 것이고, 특히 공화주의의 가치인 세속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공화주의의 공공연한 적'이라는 비난에 시달렸었던 국민전선은 프랑스 좌파가 세속주의를 잘못 이해하는 것을 이용해 '공화주의 가치의 수호자'로 거듭

나려 한다. (본지 205호 기사 '프랑스 대선을 계기로 살펴보는 무슬림 혐오, 세속주의, 프랑스 좌파를 참고하시오.)

마린 르펜은 파시스트답게 오늘날 프랑스 경제가 엉망인 이유가 "은행들의 독재" 때문이라고 맹비난하며, 어이없게도 이를 "도둑질 된 파시즘"이라고 부른다. 자신들만이 "잊혀진 계급인 중간 계급, 인민계급을 대변하는 … 반체제 후보"라는 것이다. 유럽연합과 민족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전선은 강경한 이데올로기와 활동으로 단련된 간부층을 은밀하게 육성하면서, 정교하게 선택된 언어를 사용해 중간계급의 불만과 절망을 파고들어 그들 사이에서 광범한 지지를 건설하고 있다.

국민전선은 대중을 사료잡을 거대 규모, 거리 행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짐한다. "완전한 격변의 때가 오면 … 사람들의 입장이 놀라울 정도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프랑스인들의 머릿속에서 그들이 믿었던 모든 세력이 나쁜 놈으로 보일 때 유일하게 신뢰할 만한 세력이 돼야 한다.]"(국민전선의 이론지 《정체성》)

좌파는 이런 국민전선에 맞서 싸울 때 러시아 혁명이 트로츠키가 1920~30년대에 분석한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파시스트들은 거리 시위로 세를 과시하고 지지자들을 결속시키는 만큼 무엇보다 거리에서 강력한 대중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트로츠키는 반파시즘 공동 전선을 제안했다. 혁명적 노동자 조직이 개혁주의적 노동자 조직과 함께 시중에 맞서 공동 행동을 벌이자는 것이었다.

이 정술은 오늘날 영국과 그리스 등지에서 적용돼 파시스트를 격퇴하는 데 큰 구실을 하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과 영국 총선

왜 영국 노동계급의 다수는 브렉시트를 선택했나?

차승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이하 브렉시트) 협상이 시작됐다. 이제 최대 2년 안에 영국은 어떤 식으로든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된다.

6월 초 조기 총선이 실시돼 영국의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협상하게 될 테지만,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그 과정이 순탄할 것 같지는 않다.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4월 27일 이렇게 말했다. “영국은 유럽연합을 떠나면 지금 같은 권리를 유지할 수 없다. … 영국 일부 국민은 여전히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시간 낭비다.” 영국이 유리한 조건으로 탈퇴해 선례가 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영국 총리 테레사 메이는 유럽단일시장에서까지 탈퇴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최근에는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는 영국 지배계급 내 이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영국 자본가들은 큰 변화를 원치 않는 데다, 집권당인 보수당 내에서조차 의견이 통일돼 있지 않다.

게다가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계기로 스코틀랜드 독립 움직임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 이는 영국의 해체를 부를 수도 있다.

이처럼 브렉시트는,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열강들이 공들여 세운 국제 질서의 핵심 기구 하나인 유럽연합에서 경제력 2위(세계 5위), 군사력 1위의 영국이 이탈하는 “세계사적 전환”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브렉시트: 세계사적 전환’, 〈노동자 연대〉 179호)

국민투표

이런 점에서 2016년 6월 실시된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되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탈퇴 투표는 권력층에 의해 삶이 파탄 나고 있다고 느낀 영국 노동계급 다수의 항의 투표였다. 숙련 노동자, 반숙련 노동자, 비숙련 노동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3분의 2가 탈퇴에 투표했다.

2007~15년 영국은 OECD 회원국 중 그리스에 이어 둘째로 실질임금이 많이 떨어진 나라다. 반면, 영국 최상위 부자 1천 명의 재산은 갑절 이상으로 늘어 5천7백60억 파운드(1인당 평균 8천억 원)가 됐다(영국노총).

이는 역대 영국 정부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고, 특히 2007~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에는 긴축재정을 시행한 결과다. 구제금융을 미끼로 그리스에 고강도 긴축을 강요한 것에서 보듯이, 유럽연합은 유럽 각국에 노동자 쥐어짜기 정책을 강요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직전 발표된 유럽연합 호감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유럽연합 반대 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2004년 54퍼센트에서 44퍼센트로, 프랑스에서는 2004년 69퍼센트에서 38퍼센트로, 스페인에서는 2007년 80퍼센트에서 47퍼센트로, 이탈리아에서는 2007년 78퍼센트에서 58퍼센트로 급락했다. 경제 위



브렉시트는 유럽연합과 기득권층에 대한 항의 표시

유럽연합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장차 어디로 향하게 될지는 예정돼 있지 않다. 현실을 바꾸려는 좌파의 개입은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기와 혹독한 긴축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에서 유럽연합 호감도는 27퍼센트밖에 안 됐다.”(차승일, ‘유럽연합 호감도가 급락하다’, 〈노동자 연대〉 178호)

유럽연합이 태생부터 유럽 자본의 이익을 위한 기구라는 점, 그런 만큼 비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점, 각국에 긴축을 강요하는 점, 미국이 세계 각지

에서 저지르는 만행을 나토와 함께 돕는 핵심적 제국주의 기구라는 점, 해마다 수많은 난민이 지중해에서 수장되는 데도 오히려 해상 순찰을 강화하는 등 인종차별적이라는 점을 보면 당연한 결과다.

착각

그런데 주류 언론은 유럽연합의 이런 실체에 대해서는 묻지 않은 채로 지배자들이 벌인 협상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이런 분석을 따라가면 보통 사람들은 향후 사태 전개에 개입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런 식의 접근은 국민투표 양 진영을 주도한 정당들과 그들의 의도로 시야를 좁힌다.

친기업 언론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진보계 언론으로 분류되는 〈한겨레〉가 전하는 메시지가 지독히 엘리트주의적이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 메시지를] 요약하면,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저학력자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알지도 못한 채 유럽 통합의 꿈을 망쳐냈다’는 것이었다.

1년 넘게 진행된 논쟁 속에 투표에 참가한 영국 노동계급 다수의 선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다.]”(김종환, ‘브렉시트에 대한 다른 관측들이 놓치고 있는 점들’, 〈노동자 연대〉 177호)

좌파들은 대부분 국민투표 결과에서 영국 노동계급의 항의 의사를 읽었다는 점에서는 〈한겨레〉보다 나았다. 그러나 유럽연합을 모종의 진보적 국제기구라고 착각해서, 또는 진보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는 환상을 품어서, 국민투표 결과를 ‘구 시대적 민족주의’나 ‘신고립주의’로 봤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하고 외쳤을 때 그는 노동계급의 국제주의를 말한 것이지, 지배자들의 ‘국제주의’를 말한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자본가 계급은 국민국가가 별로 분리돼 있어서 진정으로 국제주의적일 수 없다. 즉, ‘어느 계급의 국제주의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다.

국민투표 결과를 노동자들이 인종차별적 우익 포퓰리즘에 포획된 결과로 보는 견해도 흔했다. 물론 국민투표 기간 영국독립당 등 우익 포퓰리스트들이 두드러졌고, 이는 분명 경계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먼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해야 한다.

영국독립당 등은 지난 수년 동안 주류 언론과 정치인들이 긴축에 대한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영국의 전쟁 참여를 정당화하려고 이민자를 공격하고 속죄양 삼아 온 것에서 힘을 얻었다. 잔류 찬성 진영의 많은 인사들이 그런 일을 벌였다. 예를 들어 2013년 당시 내무장관이던 테레사 메이는 이주민들을 겨냥해 다음의 문구를 넣은 ‘공익’광고 차량을 운행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체포될 줄 아시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다. 최근 유럽연합의 산하 기구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직장 내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조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바로 이 과정에서 인종차별과 우익 포퓰리즘이 온갖 형태로 기승을 부릴 조건들이 조성됐다. 유럽연합은 인종차별과 우익 포퓰리즘들의 해결책이기는커녕 원인 제공자인 것이다.

좌파의 과제

그러므로 국민투표 기간에 노동운동 지도자와 좌파들이, 이주민·난민을 탓하며 긴축을 자행해 온 보수당 지도자들과 함께 잔류 찬성 진영에 서서 ‘영국은 유럽연합 안에서 더 강력하다’는 메시지를 퍼뜨리고 다닌 것은 옳지 않았다. 유럽연합에 대한 정당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을 영국독립당 같은 우익에게 떠미는 효과를 냈기 때문이다.

영국 노동자들이 인종차별적 우익 포퓰리스트들에게 포섭됐다고 여기면, 난민 연대 운동과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게 여기면 또한 이런 운동에 노동계급을 동참시킬 의욕을 잃는다. 그러면 그 운동들 자체도 약해지고, 인종차별적 우익이 더 기운을 얻을 것이다.

이렇듯 유럽연합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장차 어디로 향하게 될지는 예정돼 있지 않다. 그러나 브렉시트 협상 본격화로 유럽연합의 ‘권위’가 이제 더 많은 나라에서 도전받을 것임은 분명하다.

현실을 바꾸려는 좌파의 개입은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신자유주의와 긴축에 저항하는 유럽 곳곳 노동자와 청년들에게 ‘진보적’ 유럽주의 대신에 계급투쟁과 국제주의를 설득해야 한다.



“내 동료들을 건드리지 마라” 병원 노동자들의 이주노동자 방어 행동

사진 출처 (상단: 브렉시트 반대)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가?

이정구

‘제4차 산업혁명’ 얘기와 논의가 유행이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미래고용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향후 5년간 선진국과 신흥국 15개국에서 일자리가 5백10만 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알파고가 바둑에서 인간을 이긴 것을 보며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쩍 늘었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활용 증대로 인간이 힘들고 단조로운 노동에서 해방되는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제시한다. 이들은 2008년의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황과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로봇 도입과 자동화로 생산성이 증대해 새로운 도약이 마련될 것처럼 기대한다.

그러나 이런 낙관적 전망보다는 우려가 더 많다. 로봇과 인공지능 활용이 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이강국 교수는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일부 노동자들의 실업과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주장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 효과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 이미 1960~80년대 앨빈 토플러나 다니엘 벨 같은 ‘미래학자’들이 ‘지식 중심 구조’, ‘초산업사회’ 등을 주장하며 과장한 현상들을 보면, 최근의 ‘4차 산업혁명’ 얘기는 오래된 레코드가 반복되는 진부하고 한물간 뻔튀기로 보인다.

장하준 교수의 지적을 경청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미칠 영향은 전기의 발명이나 고속도로·철도의 개발과 비슷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인터넷이 우리 삶에 끼친 영향은 세탁기의 발명보다 작다고 한다.

훨씬 더 일찍이 마르크스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생산에 적용되면서 노동자의 노동과 일자리 그리고 자본주의 동학 등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했다. 올해 출간 1백50주년이 되는 《자본론》에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하에서 기계의 도입이 노동자의 수고를 덜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임을 지적했다.

“기계 그 자체는 노동시간을 단축시키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노동시간을 연장시키며, 기계 그 자체는 노동을 경감시키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노동강도를 높이며, 기계 그 자체는 자연력에 대한 인간의 승리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인간을 자연력의 노예로 만들며, 기계 그 자체는 생산자의 부를 증대시키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생산자를 빈민으로 만든다.”

마르크스는 기계의 도입으로 대공장 제도가 확립되면서 매뉴팩처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하지만, 전체 일자리가 준다고는 보지



조선소 노동자들 이들이 대량 해고 위기에 놓인 것은 배가 필요 없어서도 아니고, 배를 만드는 ‘4차’ 기술이 발명되서도 아니다

않았다. 한 산업부문에서 기계 사용이 확대돼 생산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 부문에 기계나 원료 등을 공급하는 다른 부문들에서도 생산이 늘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일자리 감소?

실제로 자본주의 시스템은 기술 발전과 기계 도입에 대해 역동적인 방식으로 대응해 왔기 때문에 기술 발전이 반드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

첫째, 자동화 설비가 도입된 산업에서 계속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경우다. 제임스 베센의 연구를 보면,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자동인출기(ATM)가 도입되기 시작해 최근에는 40만 개까지 늘었지만, 은행 텔러(창구 직원)는 감소하지 않았다. 자동화될 수 없는 여러 업무를 여전히 창구 직원들이 처리해야 했을 뿐 아니라, 자동인출기 덕분에 창구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처리할 여량과 기회가 늘어나자, 은행은 지점을 확장해 시장점유율을 늘리려고 했기 때문이다.

둘째, 자동화되는 산업 부문에 기계를 공급하기 위해 일자리가 생기는 경우다. 1980년대는 인쇄업 분야에서 컴퓨터 조판이 활자 조판을 대체하던 시대였다. 그때 수많은 활자 조판공들이 사라졌지만 그 대신 컴퓨터 생산 노동자와 컴퓨터 조판 프로그램 제작 노동자들이 많이 생겨났다.

셋째, 서로 상관없는 분야에서 새 일자리가 생겨나는 경우다. 1800년대 초반에는 미국 인구의 80퍼센트가 농업에 종사했지만 1900년대에 이르면 농업 인구는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는 40퍼센트에 이르렀고, 오늘날에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도 인구의 1.5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례는 농업에서 기계화의 진전으로 농업 종사자의 상당수가 계속 실직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 부문으로 흡수됐음을 뜻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실제 역사가 보여 주는 바는, 기계의 도입과 자동화 자체보다는 호황인가 불황인가 하는 경제 상황과 이에 대처하는 고용주들의 구조조정이 일자리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불황기에 접어들면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임금을 삭감해 이익을 보충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윤율 하락의 경향적 법칙

이전의 기계화·자동화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4차 산업혁명’도 노동자들의 노동을 줄이고, 그 대신 설비·기계·로봇 등과 같은 생산요소들로 대체하는 것이다.(앞서 봤듯이 이것은 자본 축적에 견주 상대적으로 노동자 수를 줄이는 것이지 노동자의 절대적 수가 감소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생산요소들은 노동자들의 산 노동을 만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죽은 노동일 뿐이다.) 아직까지 인공지능과 로봇만으로 생산을 수행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런 시대가 올 가능성은 없다. 자본주의 하에서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생산방식이 아무리 고도화되더라도 죽은 노동(기계와 로봇 등)은 산 노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한 다음 말처럼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변한다. “부르주아지는 생산도구를 끊임없이 변혁하지 않고는, 그리하여 생산관계와 그것을 포함하는 사회관계 전체를 끊임없이 변혁하지 않고는 존재하지 못한다. … 생산을 끊임없이 변혁하기, 사회적

조건을 모두 끊임없이 교란하기, 불안정과 동요를 지속시키기가 부르주아지의 시대를 다른 모든 시대와 구분해 준다.”

‘4차 산업혁명’론이 과장하는 현실을 냉정히 살펴보면, 자본이 노동에 의존한다는 기본 전제조건이 바뀌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자본가들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인공지능·로봇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이는 “자본주의 생산의 진정한 장벽은 자본 자체”라고 마르크스가 말한 이윤율 하락 경향을 심화시킨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자본가들이 얻을 수 있는 총이윤은 그들이 착취하는 노동자들의 숫자와 착취율에 달려 있다. 그러나 어떤 자본가가 경쟁 자본가

보다 노동자한테서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려면 기계와 원재료 축적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만약 이윤의 양(다시 말해 총고용)이 정해진 상황에서 투자량이 증가한다면, 투자에 대한 수익, 즉 “이윤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자본주의가 산 노동보다 기계와 로봇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할 경우 전체 자본가들의 수익성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게 된다. 자본주의가 이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외부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의 동역학 때문이다.

본지 웹사이트에서 관련 기사 ‘언어는 기계가 따라잡을 수 없는 인간 지능의 토대’도 읽어 보세요.

대안은 기본소득?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대안이 제안된다. 노동당 장흥배 정책실장은 “일자리 문제로만 본다면 4차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남성 숙련 노동자들을 위협했던 기계처럼 거대한 재앙”이라며 “4차 산업혁명이 시장소득인 임금에 미칠 영향은 명약관화”므로 결국 “4차 산업혁명은 기본소득을 불가피한 요청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전제는 그릇된 것이라고 우리가 위에서 논의했다. 여기서는 노동력 비용인 임금 축소를 불가피한 것으로 전제하고 기본소득으로 이를 대

체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의문에 붙이고자 한다. 필자는 기본소득의 취지와 정신에 공감한다. 특히, 형편 없는 복지 때문이라도 기본소득이 도입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하지만 임금 감소를 불가피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노동력 시장에서 노동자 저항의 중요성과 의미를 과소평가하게 될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 자본가들이 경제 위기를 핑계로, 또 새로 도입한 로봇이나 자동공정 라인을 빌미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임금을 삭감하거나 노동강도를 높이려 한다면 이에 대한 저항을 조직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어쩌면 기본소득 도입보다 더 중요하다.

성소수자들에게 비수 꽃은 문재인

성지현

대선 정국에 동성애 쟁점이 돌연 뜨거운 감자가 됐다. 4월 25일 JTBC 대선 후보 토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가 우익들을 결집시킬 쟁점의 하나로 동성애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홍준표는 “군 동성애는 국방전력을 약화시킨다”,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창궐한다” 따위의 거짓말과 혐오 발언을 쏟아 내며 문재인에게 동성애를 반대하느냐고 집요하게 물었다. 더 나아가 그는 이후 선거운동에서 “동성애는 하늘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가 아니고 엄벌을 해야 한다”는 말도 지껄였다. 문재인은 홍준표의 추궁에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확인해 줬. 성소수자들의 지탄과 항의를 받았다. 홍준표의 발언은 오래 전부터 우익 기독교 세력이 퍼뜨려 온 전형적인 거짓말이다. 홍준표가 떠받드는 미국은 2011년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제한하는 정책을 폐지했고, 2016년에는 커밍아웃한 동성애자가 육군 장관이 됐다. 프랑스, 독일, 덴마크, 이스라엘, 대만 등지에서도 별도의 제한 없이 동성애자들이 군인이 된다. 한국의 질병관리 본부는 이렇게 지적했다. “HIV 감염은 성정체성과 관계없이 HIV 감염인과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할 때 전파된다.”(강조는 인용자) 물론 홍준표에게 이런 엄연한 사실이란 하등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미수에 그쳤지만 강간 공모 사실을 자서전에 그리운 후일담처럼 써놓은 데서 알 수 있듯 홍준표의 의식이 워낙 저열한 데다, 동성애를 이슈로 들고 나와 핵심 지지 기반을 다지고 핵심 우파들을 결집시키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동성애 혐오를 자신의 표지로 삼는 기독교 우익은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의 주요한 한 축이었고, 이들 일부가

자유한국당과 ‘공동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있다. 홍준표는 선거 기간에 주요 기독교 우익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며 “[분열된] 보수 우파 결집”을 강조해 왔다.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공개 석상에서의 이런 혐오 발언은 성소수자를 더 고립시키고 혐오와 차별을 부추긴다. 혐오 발언의 해악 때문에 유럽의 일부 나라들에서는 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있을 정도다. 그런데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이자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는 문재인이 홍준표의 혐오 발언을 반박하기는커녕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거듭 말해 배신감을 안겨 줬다. 문재인은 단호하고 확신에 찬 말투와 표정은 이것이 그의 평소 가치관임을 느끼게 했다. 항의가 빚발치자 문재인은 몇 번이나 입장 표명을 미루다가 4월 27일 자신의 발언이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해 반대”한 것이었고, “성소수자들에 아픔을 드린 것 같아 송구스럽다”고 했다. 또한 “차별에는 반대”하지만 동성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의 해명은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확인시켜 줬을 뿐이다.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이 동성간 성희롱과 성추행의 빌미”라는 것은 성폭력의 원인을 엉뚱한 데로 돌리는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이성 간 일어나는 성희롱·성추행은 이성애 때문인 것인가? 핵심은 상호 합의 여부, 즉 성적 자기결정 존재 여부이지, 성적 지향이 아니다. 문재인의 주장은 군대의 상명하복식 위계와 권위주의적 분위기가 군대 내 성폭력의 원인이라는 점을 흐린다. 문재인의 “군 내 동성애 반대”는 군형법 92조 6항에 대한 옹호로도 읽힌다. 문재인은 군형법 92조 6항 폐지 요구나 최근 육군 내 동성애자 색출 사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안 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동성애 혐오 경쟁하는 꼴 보자고 쫓돌 든 게 아니다

그러나 현재 육군에서 군형법 92조를 근거로 구속된 A대위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는 단지 동성애자였고 합의 하에 동성간 성관계를 했을 뿐이다. 군형법에서 금지하는 ‘영내 공공장소에서의 성행위’도 아니었다. 이성애자들에게는 합법인 결혼이 동성애자들에게만 허용되지 않는 것도 명백한 차별이다. 문재인은 동성혼 반대에 단호하다. 립서비스 이런 차별적인 법·제도 개선을 반대하면서 “차별에는 반대한다”니 모순이다. 군형법 92조로 언제든 처벌받을 수 있는 동성애자 군인들이 있다. 그리고 “현행 법 체계”를 이유로 혼인 신고서가 계속 거부되는 김조광수·김승환 부부 같은 커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 차별의 조건은 그대로 둔 채 “차별에는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문재인이 우익 기독교 행사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염려 말라”며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외면하는 것도 그의 “차별 반대” 발언이 정치공학작 표

산 속에서 쉽게 뒤집힐 수 있는 알박한 책략임을 보여 준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자신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명백한 후퇴다. 문재인 개인뿐 아니라 민주당 자체가 그동안 차별 문제에서 일관되지 않고 우파의 압력 앞에 취약했다. 2013년 민주당 의원 김한길과 최원식은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가 우파들의 반발에 스스로 철회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2014년 우파들이 극렬히 반대하자 서울시민인권헌장을 폐기했다. 민주당은 그 당의 일부 진보파 지지자를 의식해 때때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거나 ‘차별 반대’ 등을 말하지만 이는 립서비스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과 같은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민주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데서 우파들과 결국에 협력할 태세가 돼 있고 이때 결립들이 되는 쟁점들은 손쉽게 포기하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기반과도 관계가 있다. 민주당은 기반이 자본가 계급이기 때문에, 비록 그 계급의

제2 선호 정당일지라도 기본적으로 착취를 지상과제로 여긴다. 자본가 계급은 효과적인 착취를 위해서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고 차별한다. 특히, 성소수자 차별은 소위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안정적인고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을 떠맡길 수 있는 형태의 가족만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사상 말이다. 이런 점에서 성소수자 차별에 맞선 투쟁에서도 민주당으로부터, 또 자본가들로부터 독립적인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중요하다. 박근혜 퇴진 쫓돌운동의 일부였던 성소수자들은 ‘쫓돌 대선에 동성애 혐오가 웬말이냐’며 정당한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동성애 혐오 경쟁을 하는 꼴을 보려고 우리가 쫓돌을 든 것은 아니다. 문재인은 “군 내 동성애 반대” 발언 철회하고, “차별 반대” 말대로 성소수자 차별하는 군형법 92조 6항 폐지를 포함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메이저 후보 5인 중 JTBC 대선 토론에서 성소수자를 방어하겠다고 밝힌 유일한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

17년 전통의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맑시즘 2017

7월 20일(목) ~ 23일(일) 장소: 서울 / 주최: 노동자연대

참가신청 · 문의

marxism.or.kr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marxism@marxism.or.kr

연사들



해외연사 실라 맥그리거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당원이고 여성 쟁점에 관한 여러 글을 썼다. 국제사회주의자들(IS)이 발행한 <위민스 보이스> (Women's Voice)의 편집자였다.

맑시즘2017에서 연설할 주제 :

- ★ 마르크스주의와 오늘날의 여성 차별
- ★ 섹슈얼리티와 자본주의
- ★ 여성과 <자본론>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
민행동(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조직노동자운동 팀장



유경근
예은아빠,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오준호
《세월호를 기록하다》
(미지복스) 저자,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
위원회 작가/록단



한선희
《다윈과 함께》(사이언스북스)
공저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
의학 교실 박사 과정 수료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인기
빈민해방실천연대
수석부위원장



박흥수
철도 기관사,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

※ 이 외에도 국내 노동운동·
사회운동 활동가, 진보·좌파
저술가들 수십 명이 맑시즘
2017에 옵니다.

동성애자 군인 색출·처벌 중단하라

양효영

대선 토론회에서 홍준표는 “군대 내 동성애는 군대 기강을 약화시킨다”는 등 전형적인 기독교 우파의 동성애 혐오 레퍼토리를 들고 나왔다. 이에 동조하다가 항의를 받고 ‘해명’한 문제인도 “군 내 동성애 반대”를 다시금 밝혔다.

대선 후보들의 이런 발언은 실제로 동성애자 군인이 단지 성적지향을 이유로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더욱 문제가 있다.

군인권센터는 얼마 전 육군참모총장 장준규의 지시로 육군 내에서 동성애자 색출이 벌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올해 초 두 군인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SNS에 게시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계기로 육군 중앙수사단은 동성애자 군인들을 색출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동성과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던 대위가 전역을 채 한 달도 안 남기고 구속됐다. 지금까지 약 30건 정도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파장이 커지자 육군은 육군참모총장 장준규가 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미 3월 말부터 육군 법무실 고등검찰부가 일선 부대에 ‘군형법상 추행죄 처리 기준 검토’라는 문서를 하달했

다. 그 문서는 ‘추행죄’(군형법 92조의 6)가 적용된 사건들에 “기소 원칙”을 지키고 “죄질 불량”의 경우 구속 고려”하라는 가이드라인 격 문서였다. 군인권센터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 없이 고등검찰부의 단독 판단으로 이런 지침이 내려오긴 어렵다고 한다.

군이 이번처럼 적극 나서서 동성애자 군인 색출과 처벌 시도를 추진한 것은 이례적이다. 2004년 초부터 2007년 말까지 약 4년간 군형법 92조 6이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면, “비강제에 의한 동성애 행위”가 문제가 된 것은 네 건이었고, 모두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종결됐다.〈군대 내 동성애 행위 처벌에 대하여〉, 《공익과 인권》

그런데 이번에 분위기가 상당히 다른 데에는 기독교 우익이자 장로인 육군참모총장 장준규의 성향이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장준규는 한국기독교군인연합회 회장이기도 하다. 한국기독교군인연합회는 군사독재 정권의 실세들이 초기에 회장을 역임한 보수적 기독교 단체다.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경철 전 경호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도 이 단체의 회장을 역임했다.

장준규는 우익적이고 부패한 지배계급의 일원이다. 2015년에는 성폭행



박근혜 탄핵으로 심기가 뒤뜰린 기독교 우익의 반동적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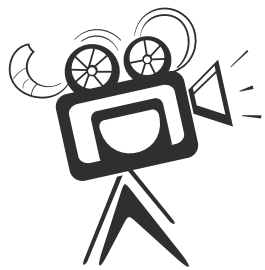
피해를 당한 여군 부사관에 대해, ‘여군들도 싫으면 명확하게 의사 표시를 하지 왜 안 하냐는 망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질타를 받았다.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져 나오던 지난해 12월에는 우병우가 장준규에게 군 장성 승진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폭로되기도 했다(더민주당 박범계

의원).

하지만 장준규 개인의 성향만이 아니라, 기독교 우익들이 그동안 동성애 혐오를 부추기며 각별히 군대 내 동성애를 몰고 늘어져 왔던 것도 현 사태에 영향을 미친 듯하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한창이던 2016년 12월에 일부 군 출신 기독교 우익이 주축이 돼 ‘바른군인권연구소’를 설립했다. 여기엔 육군군사법원 법원장, 국방부 법무관 리관을 역임한 자들도 포진해 있다. 게다가 이들은 4월 초, 인천지법 판사가 군형법 92조 6에 대한 위헌 심판을 다시 재청해 한껏 예민해진 상태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탄핵 반대 태극기 시위 부대의 핵심 세력 중 하나가 기독교 우익이었는데, 최근 이들이 박근혜 탄핵으로 심기가 뒤뜰린 것도 반동적 시도의 동기가 된 듯하다.

성소수자 차별 반대 운동은 동성애자 혐오 주장의 수준을 넘어, 군대 내의 일이지만 적극적인 색출과 구속까지 벌어진 이번 시도를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이런 시도가 더 발전하지 않도록 저지해야 한다.

육군은 동성애자 군인 색출을 중단하고 구속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또한 동성애 차별하는 군형법 92조의 6은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영화 <런던 프라이드> 국내 개봉 동성애자들과 광원 노동자들의 연대를 다룬 탁월한 영화

니콜라 필드 영국 광원 파업 당시 ‘광원들을 지지하는 레즈비언과 게이들’에서 활동

이 영화는 노동운동사의 전환점이 된 중대한 투쟁 속에 이질적인 두 집단이 만나 사랑과 연대를 나눈 감동적 실화를 다룬다.

두 집단 중 한 쪽은 사우스웨일스의 광산촌 주민들이다. 다른 한 쪽은 광원 파업 지지 활동에 “발 벗고 나선” 런던의 LGBT 활동가들이었다.

1984년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는 전국광원노조(NUM)를 분쇄하고자 한 판 붙으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에이즈를 이용해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기고, 점차 기세를 올려 가던 동성애 차별 반대 운동을 악마화했다.

그러나 대처는 두 전선 모두에서 반격에 직면했다. 광원들이 무기한 직장이탈 파업에 돌입해 항의의 의사를 온몸으로 표현하면서, 영국 전체가 [파업 찬반을 놓고] 양극화됐다. 성소수자들도 언론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 거리에서의 폭행, 가혹한 전대에 단호히 맞섰다.

합정수사와 가혹행위를 일삼는 경찰은 성소수자들에게 원수 같은 존재였다. 런던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자인 성소수자들이 보기에, 이제 바로 그 경찰이 광원들을 가혹하게 탄압할 것이었다.

이들은 개인적 [차이로 인한] 충돌을 극복하고, ‘광원들을 지지하는 레즈



비언과 게이들(LGSM)’이라는 단체를 결성해 굳게 단결했다. LGSM은 런던에서 남성 동성애자들이 자주 찾는 술집과 클럽을 돌며 광원 파업에 대한 연대를 모으기 시작했다.

영화는 당시 인물들을 재창조하면서 그 후 일어났던 일들을 설득력 있게 묘사한다.

미니버스

모금한 돈을 전달할 마음을 지정해 달라는 LGSM의 요청을 광원노조 간부들이 무시하자, LGSM 활동가들은 돈을 직접 전달하고자 했다. 이들은 미니버스를 대절해 사우스웨일스의 척박한 산지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영화는 LGBT 활동가와 광원들 사이의 어색한 첫 만남을 익살스럽게 묘사한다.

말을 더듬고 어색한 악수를 나누던,

잃을 것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갑자기 불꽃이 터져 나왔다.

영화는 스틸 넘치고 왁자지껄하며, 디스코 음악과 춤, 피켓팅과 키스가 그득하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돌처럼 굳은 냉소주의자들의 마음도 감동으로 녹아내릴 것이다.

빌 나이, 이멜다 스타튼, 패디 콘시던 같은 최고의 배우들이 이 웃기면서도 감동적인 영화에서 훌륭한 배역을 맡아 열연했다.

지배자들은 성소수자 차별이 사라지려면 몇 세대는 걸릴 것이라 말하지만, 바로 그 차별을 법으로 못 박아 둔 것은 지배자들 자신이다.

그러나 이 영화가 보여 주듯이 계급 투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단결이 절실해질 때면, 편견은 불날 눈 녹듯 사라질 수 있다.

LGSM 활동을 했던 나는, 영화가 개봉하기 전만 해도 이 주류 [상업] 영화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그러나 시나리오 작가 스테판 베레스포드는 LGSM 주요 활동가들을 만나, 영화의 스토리와 영화가 담은 시대적 특성이 진솔하게 살아나도록 했다.

영화를 즐겁게 보시라. 다만 어느 캐릭터가 나인지 물어 보지는 마시라.

출처 영국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417호
번역 김준호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파업대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속·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중고등학교 | ☐ 기타) _____

[선택] 휴대전화번호 _____

회비약정액(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서명)

www.worker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olidarity.org로 보내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olidarity.org

사드를 즉각 철수시켜라

김영익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이 성주 골프장에 사드 장비를 기습적으로 반입한 일은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사드 문제가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된 것에 아랑곳없이 한·미 양 정부는 배치 작업을 착착 진행했다.

그리고 2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는 인구 2백 명도 안 되는 작은 농촌 마을 성주 소성리에 경찰 8천여 명을 투입해 미군이 장비를 들일 진입로를 열어 줬다. 소성리 주민과 연대하려 오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모든 길을 막은 채 말이다. 사드 반입 과정에서 87세 할머니가 군화발에 짓밟히는 등 많은 주민이 부상했다. 부상자 대부분이 80대 할머니들이다.

사드를 배치하기까지 지난 몇 년 동안 정부는 시종 거짓말로 일관해 왔다.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국 정부 인사들이 사드 배치를 놓고 한국 정부와 협의의 중이라고 밝힐 때마다, 박근혜 정부는 “3No(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라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지난해 배치를 공식화한 후에도 정부의 거짓말은 여전했다. 배치 직전까지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작업이 남아서 대선 전에 배치가 완료되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었다!

대선 전에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고 가동하려고 정부는 온갖 무리수를 썼다.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사드 배치를 감행하고 레이더 가동 준비에 들어가는 등 불법·탈법 논란도 감수할 태세다.

거짓말

미국과 한국 정부들은 “북핵이 긴급한 안보 위협”으로 대두해 사드 배치를 조기에 감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드는 한국으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아니다. 이 점은 미국 의 회조사국 보고서에 적시돼 있고, 한국 정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국 정부는 사드의 성주 배치로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는 게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2012년 한국 국방부가 밝힌 MD 편입 기준에 사드 레이더 배치가 포함돼



사드 배치 감내하고 10억 달러도 내라고? 성주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군 차량을 막아선 원불교 성직자와 주민들

있었다. 26일 미국 태평양사령부 사령관 해리 해리스는 하원 청문회에 일본 X-밴드 레이더, 괌 사드, 한국 사드 배치 등을 언급하며 이렇게 보고했다. “태평양사령부는 완전히 통합적인 탄도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목표로 일본, 한국, 호주와의 협력을 지속할 것 [이다.]”

평화네트워크 정육식 대표의 지적대로, 해리스의 보고는 성주 사드가 주되게 중국을 겨냥한 통합 MD의 일부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성주·김천 주민뿐 아니라, 한반도 주민 전체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전체가 강대국들 간 갈등과 경쟁의 소용돌이에 더 깊이 빨려 들어갈까 할 것이다. 그에 따른 위협은 결국 보통 사람들이 떠안게 된다. 박근혜 퇴진 운동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사드 배치를 박근혜와 함께 사라져야 할 적폐의 하나로 본 까닭이다.

트럼프 정부는 북핵 ‘위협’을 한껏 부풀리며 선제공격설을 흘리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크게 높였다. 그리

고 이 긴장을 틈타 사드 배치를 밀어붙일 수 있었다. 항공모함 칼빈슨 호의 한반도 해역 진입과 사드 장비의 성주 반입이 맞물린 건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게 분명하다.

심지어 트럼프는 27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사드가 배치됐으니 한국 정부가 10억 달러(약 1조 1천3백억 원)를 내놓아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제 내놓고 비용 부담을 떠안으라는 것이다.

북핵 ‘위협’을 이용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관철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와 본질적으로 같은 노선을 추구하는 셈이다. 트럼프가 내놓은 새 대북정책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는 그가 전임 정부의 실패한 정책 (“전략적 인내”)이라고 부른 것과 대동소이한 것이다.

문&안

한국 지배계급의 친미 노선 때문에 미국의 사드 ‘알박기’가 가능했다. 지배자들은 한미동맹으로 ‘안보적 이익’을 확보하고 국력을 상승시키려 한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사드 배치를 밀

어붙인 황교안 (과도)정부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재인, 안철수 등 주류 야당 후보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드 성주 배치 전에 안철수는 이미 배치를 찬성한다고 했고, 국민의당은 안철수를 따라 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당론을 뒤집었다. 국민의당 박지원은 지난해 여름 성주에 내려가 으스스대며 ‘사드 배치를 반드시 막겠다’고 거짓 약속을 했다.

문재인도 “북한이 계속 핵 도발을 하고 핵을 고도화한다면 사드 배치가 강행될 수 있다”고 암시하는 등 성주 주민들을 배신했다. 박근혜 퇴진 운동 덕분에 대선 1위 후보가 됐는데도 말이다. 문재인과 안철수의 이런 배신 행보가 한·미 당국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줬다.

성주 골프장에 사드가 배치돼 곧 운용이 시작될 테지만, 그것으로 상황이 모두 끝난 건 아니다. 미국의 MD 구축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도 미국이 한국 새 정부에 많은 요구를 쏟아낼 게 분명하다. 반제국주의자들은 미국

의 구상을 저지하고 사드를 철수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차기 정부가 곧 이 문제에 직면하게 만들어야 한다. 물론 그들은 ‘이미 들어온 마당에 즉시 되돌리기는 어렵다’며 합리화할 것이다. 사드가 들어와 가동되는 와중에 ‘국회 논의’나 ‘공론화’ 등 이 핑계 저 핑계를 내세워 시간을 끌려 할 것이다.

그러나 마을을 지키겠다고 보행기에 의지해 시위에 참가하는 소성리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려야 한다. 지역 주민들의 끈질긴 저항은 박근혜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고, 사드 배치 문제가 대선 최대 쟁점의 하나로 부각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실현하려면, 반제국주의 운동가들은 “함께 성주로 달려가”는 데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보다는 중앙 정부의 친제국주의 정책에 도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려면 수도 서울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에서 노동계급이 동참하는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노동자 연대〉는 마르크스주의로 세계를 분석합니다.

- ▶ 투쟁하는 노동자와 노동자 연대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신문

▶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논쟁적인 신문

▶ 저항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신문
- ▶ 차별과 억압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는 신문

▶ 국제적 저항과 운동 소식을 좌파적 관점에서 전하는 신문

▶ 독자들이 판매자이자 기고자이고 후원자인 신문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wspaper.org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26개 호) 5만 원, 2년(52개 호) 10만 원

신청 : 02-777-2792, 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 입금 계좌 (예금주: 주례프티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통협 301-0010-1643-71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구독기간 ☐ 1년 (26개 호) 50,000원 ☐ 2년 (52개 호) 100,000원 ☐ 2년 이상 ()년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보내 주세요. 담당자가 확인한 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 ws@wspaper.org	